



주간통일정세 2009-16(2009.04.13~04.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영원발전소 현지지도(4/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함경남도 영원발전소를 현지지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수력발전소는 건설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건설해 놓기만 하면 만년대계로 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하다”며 유망한 발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과 희천발전소 건설을 조기에 완공할 것을 지시
- 그는 또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설비와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해 발전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중손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언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 1996년 공사에 착수해 12년 만에 완공된 영원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3만5천여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동강 상류지역에 있어 앞으로 여름철 대동강 홍수관리용으로 사용될 전망

● 北 축포야회, 김정일 이례적 참석(4/15, 조선중앙통신; 4/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열린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에 참석해 관람석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중앙TV는 16일 오전 축포야회 광경을 녹화 방송, 방송에선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대동강변 곳곳과 대동강을 지나는 배 등에서 폭죽이 계속 쏘아올려져 하늘에서 터지는 모습이 55분가량 방영
-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주석단에선 시종 무표정하고 경직된 표정이었으나 이날 불꽃놀이 관람 때는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나. 정치 관련

● 도별 군중대회 개최(4/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의 도 소재지들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각각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

● 4·19맞아 반미투쟁 선동(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4·19정신으로 매국반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은 “파쇼독재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4·19 봉기자들이 지녔던 그 투쟁정신으로 결연히 들고 일어나 사대매국과 파쇼독재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날을 기어이 안아와야 한다”고 주장
- 또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남한의 각계 각층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촉구

● 핵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4/1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9일 ‘불공정성과 전횡의 극치, 단호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평화적 위성발사까지 문제시하며 도전하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북한은 “부득불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 전횡의 극치”라며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실감하게 했다”고 언급
- 신문은 또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지난 14일 ‘6자회담 절대 불참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자주적인 대응조치”라고 옹호하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최고이익 수호를 담보하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자기 존엄을 훼손당하면서까지 6자회담에 참가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동설한에 산딸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
-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된 조건에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또 북한이 “자주적인 우주이용권을 계속 행사해나가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됨이 없



이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는 데 대해 그 누구도 시비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거듭 주장

● **노동신문, 南 민간단체 방북불허 비난(4/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북남관계의 완전차단을 노린 극악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 등의 방북을 불허하는 데 대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
- 신문은 “최근 남조선(남한) 보수당국의 북남관계 차단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관련시켜 그 무슨 안전보장이니, 신변안전이니 하는 당치 않은 구실을 대며 가로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
- 신문은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학술교류와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과 북남 협력사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날려 보낸” 남한 정부가 “간간히 유지되어 오는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마저 근원적으로 파탄시키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리려는 반통일적 흉계”라고 비난
- 신문은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남조선(남한) 민간단체들의 평양 방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민간단체들의 협력, 교류마저 차단된다면 이제 북남관계에서 남을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주장

● **北, 국방위원회 위원 사진 모두 공개(4/10,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이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구성원 전원(12명)의 얼굴 사진을 실어 보도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짐. 신문은 ‘김정일 3기’를 출범시킨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 자에 국방위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이용무·오극렬 부위원장, 전병호·김일철·백세봉·장성택·주상성·우동측·주규창·김정각 위원순으로 사진을 게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은 1면 전면에 실음.
- 우 부부장은 국방위원 선임 직후 인민군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

● **北강성대국 건설, 젊은세대가 선봉(4/16, 조선신보; 4/7, 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16일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이 평균 나이 30대의 수재들이라며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서 확실히 젊은 세대가 선봉적 역할을 놓고(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지난해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린 강선(천리마제강의 옛 이름)의 전기로 현대화에서 주인공이 된 것은 평균 나이 25살



의 청년들이었다”고 소개

- 4월 7일 노동신문은 ‘강성대국 대문을 두드렸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광명성 2호’를 만든 과학자들이 “평균 나이가 30대인 젊은 과학자들”이라며 “‘광명성 1호’를 성공시킨 연구집단의 1번수가 아버지라면 ‘광명성 2호’를 성공시킨 연구집단의 1번수는 그 아들”이라고 소개

● **간부들, 금수산공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을 맞아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15일 금수산기념공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들은 또 만수대 언덕의 김 주석 동상을 찾아 헌화했으며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기도 했음.

● **北김영남, 韓.美 전쟁 일으키면 징벌(4/14,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고 김일성 주석 97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미국과 남조선 친미 보수 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으로 하여(인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은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져온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
-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국력을 세계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우리 민족의 일대 경사”라며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돌격전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고 주장

● **北인민군보위사령관, 대장 승진(4/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발표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9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 줄 데 대하여’를 통해 북한의 김원홍 인민군보위사령관이 상장(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
- 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도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이 된 우동측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낡음. 김 위원장은 명령에서 고수일도 상장으로 승진시켰으나 그의 구체적인 직책은 알려지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또 윤경서 등 14명을 중장(소장)으로, 공병철 등 37명을 소장(준장)으로 각각 승진시키면서 “뜻깊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이번 승진인사를 한다고 밝힘.



● **北 유엔대표부, 비장한 분위기속 침묵(4/14, 연합)**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13일(현지 시간)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신선호 대사와 박덕훈 차석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기자들에게 일절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

● **北, 6자회담 불참, 기존합의 파기(4/14, 북한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주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시사
- 또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했다”고 주장
- 성명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佛기업 인수 北시멘트공장에 실질투자 안해(4/17,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건설사인 라파즈사가 이집트 회사로부터 북한의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 지분 50%를 인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자



유아시아방송이(RFA)이 17일 보도

- 라파즈사의 클레어 마티뉴 공보담당자는 “투자는 없다”며 “그냥 원래 있는 공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빌딩이나 공장을 짓지도 않았고 (북한) 내수용 시멘트 생산에만 전념하는 상황이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마티뉴 공보담당은 북한의 열악한 기업 환경도 문제이지만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상원 세멘트는 “우리 회사가 소유한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공장 중 하나”라며 “북한에서 생산하는 시멘트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도 받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 그는 또 상원세멘트는 “이전보다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공장의 가동률이 늘지는 않았다”고 언급
- * 상원세멘트는 오라스콧이 2007년 7월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공장 지분과 탄광 채굴권을 라파즈에 넘겼음.

● 北, 유·무선간 전화통화 지방으로 확대 중(4/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평양 외의 지방에서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인 집 전화와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재중 동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함경북도와 황해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기존의 유선통신만 가능하던 기기에서 무선중계가 가능한 통신기기로 바꾸고 있어 “지방 사람들도 휴대전화로 집 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됐고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지난 1월말 황해북도에서 휴대전화로 거액의 골동품을 거래하던 주민들이 국가보위부의 휴대전화 감청 때문에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보도, 소식통은 “이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은 큰 장사 거래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정보들은 휴대전화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고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총참모부 PSI는 선전포고 거듭 경고(4/18,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
-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특히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쪽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마. 사회·문화 관련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행사의 하나로 열렸던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8일 평양대극장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폐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부총리, 강능수 문화상, 박관오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

●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연환공연 개최(4/16, 조선중앙통신)

-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연환공연이 16일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교예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에 앞서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번 축전 참가자들에게 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날 낮 평양체육관에서 친선유희오락경기를 갖기도 했음.

● 北, 태양절 때 ‘파격’ 사흘연휴 시행할 듯(4/14, 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는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북한 당국이 올해 3일 연휴를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해마다 이틀에 그쳤던 태양절 연휴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 14일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태양절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정했음.
- 올해의 태양절 기념행사도 4월 7일 종합체육대회인 ‘만경대상’ 체육대회와 원로화가 전시회, 명절 요리축전 등이 치러졌으며 중국, 러시아, 독일 등 20여개국 예술단이 참가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0일 개막해 최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평양대극장 등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음.

● 北, ‘요리축전’에 각종 이색요리 등장(4/13,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요리협회가 지난 6~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최한 제14차 ‘4월의 명절요리 축전’에서 각종 이색 요리가 등장했다고 조선신보가 13일 소개
- 축전에는 옥류관, 청류관, 평양송어국집 등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과 평양고려호텔, 평양호텔 등 대외봉사 단위들, 각 도의 요리봉사 부문들이 참가, 이번 축전에선 특히 평양호텔이 내놓은 타조고기 전골과 뱀장어 요리들이 호평을 받음.
- 축전에는 또 메기 요리, 뱀장어 요리, 강냉이국수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도도 과정에 가르쳐 주신 음식들과 요리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신문은 보도

● 北, 평양 현대적 개건보수 역점 보도(4/12, 조선중앙통신)

- 12일 조선중앙통신이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앞



- 두고 평양시의 여러 봉사망(봉사시설)과 건물이 “현대적으로 개건 보수”돼 “모습이 더욱 일신”됐다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점이 밀집한 창광음식점거리는 차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늘어선 18개 식당의 외부공사가 끝났음. 본래의 건축 형식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각 식당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색깔의 타일을 붙인 식당들은 주변의 고층건물, 살림집들과 한데 어울려 “경쾌하고 세련된 감을 준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또 “봉화거리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봉사망들이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와 타일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됐으며, 평양제1백화점의 지붕과 종합청사가 새롭게 개조됐다고 보도
 - 이밖에 “걸음길(인도)들이 색 보도블록(블록)들로 특색있게 꾸러지고” 새로 화단과 잔디밭이 조성됐으며 “수도의 야경을 이채롭게 할 불장식도 새롭게 하였다”고 통신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및 유엔 안보리 관련

- **美, 6자회담 참가국들과 4월말 북한문제 협의(4/16, 교도통신)**
 -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이달 말 회동을 갖고 북한 로켓 발사로 촉발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6일 방미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는데 마에하라 부대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면담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
-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트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 이번 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
 - 의장성명은 4월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채택

-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돼 10분 만에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종료

나. 북·미 관계

● 美, 3월 카터 방북 타진, 北 거부(4/19, 산케이 신문)

- 미국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3월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
-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비공식으로 타진 받은 북한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신문은 미국 및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美국무부, 北과 대화 갖고 입장전달(4/17, 연합)

- 미 국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거부 선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등에 대한 철수 명령과 관련, 최근 직접 대화를 갖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남. 국무부는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해 온 미 검증요원 4명이 수 일 내에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접촉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conversations)를 가졌으며, 우리의 입장/views)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언급,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북·미간 접촉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는지,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그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몇차례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대상 기관 및 물품 선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美, 유엔의 對北 제재 확대 검토(4/17, 연합)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한 위원회가 소집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힘.

● 美과학자들, 北요청으로 이르면 7월 방북(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르면 7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 국무부는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고 미국 시라큐스대의 스투어트 토슨 교수가 밝힘. 이들 방북단은 197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볼티모어 박사를 단장으로 해 컴퓨터와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자 수명과 과학단체, 미국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

- 방북단의 목적은 북한과 미국의 과학자간 신뢰관계를 정립하고 어느 분야의 과학 교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20명, 22명의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 김책공대를 방문한 이래 4년 만에 미국의 중량급 과학자들이 방북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설명
- 북한은 2001~2005년 7차례 김책공대 연구진을 시라큐스대에 보내 공동연구토록 했으며, 김책공대의 컴퓨터공학자 6명이 2007년부터 3개월~1년 일정의 미국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북한 당국이 불허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RFA는 소개
- 한편 캐서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과학자를 미국에 장기 연수시키는 것은 꺼리지만 독일에는 무리해서라도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건축학 전공 학생 10여명이 독일에서 최근 5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쳤고 이달부터 30여명의 학생이 컴퓨터를 포함한 석사과정을 시작했다고 소개
- 최근 독일을 방문했던 그는 특히 “북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독일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자금을 덜 테니 연구과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북측 자금은 3년 계약으로 독일에 파견된 70여명의 북한 의사들이 베를린과 인근 도시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독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

● 美, 北 결과 감당해야, 대화 복귀촉구(4/15, 미국무부, 백악관)

- 미국은 15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회담 불참과 핵 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북한에 대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 불능화팀에 대한 북측의 추방 명령을 확인하면서 “이는 후퇴하는 조치”라고 비판, 그는 “북한이 자신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안했지만, 어제와 같은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 백악관도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북한이 2005년 9월 핵프로그램의 해체에 합의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하고 “핵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계속된 진전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美스미스소니언서 北미술 전시회 계획(4/1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전시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이번 전시회를 추진중인 네덜란드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프란치스쿠 브뢰르센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아시아문화계획(Asian Cultural Program)’측이 북한의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박물관측과 전시회 시기와 작품 선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전시회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동양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 한 곳과 네덜란드의 그로닝거 박물관도 북한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네덜란드 관객들이 북한의 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 전시회 준비를 위해 4월 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자국의 미술품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전시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
-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전시될 북한의 현대 미술품은 주로 산수화와 민속화 등 회화이며, 김성희, 정창모, 문화춘 등 북한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비롯해 북한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고 RFA는 소개

● **美, 안보리에 11개 北기업 리스트 제출 계획(4/15,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회의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11개의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
- 이들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 및 금융회사로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대표적임. 이 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업체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와 설비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무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추정
- 방위 복합기업체인 ‘조선령봉종합회사’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는 군수물자 확보 및 군사 관련 물자 매각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회사는 ‘단천상업은행’으로 탄도 미사일이나 일반 무기 거래의 결제를 담당, 이 회사의 전신인 ‘창광



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 아프리카로 매각한 무기대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령봉종합회사의 자회사 8개사도 리스트에 포함됐음.

● 클린턴, 北 추방령 무익한 대응(4/15,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성명 채택에 맞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및 불능화 검증 요원 추방령을 내린 것은 무익한 대응이라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과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북한과도 대화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이 북·미 양자 또는 6자회담의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

다. 북·중 관계

● 김영남, 방북 中정협 부주석 면담(4/1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중인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은 후진타오 총서기와 김정일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 리 부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4일 방북했으며 북·중 우의 탐에 헌화

● 中외교부장, 북미관계 개선·발전 희망(4/17, 니혼게이자이 신문)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16일 최근 북한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북미 양국의 직접 접촉을 희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
- 양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니혼게이자이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은) 양자 루트나 다자 루트를 통해서도 쌍방이 서로 촉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왜 (로켓 발사) 행동을 취했는지는 북한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
-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며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 “회담 프로세스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표명, 양 부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프로세스 유지 관계 각국의 공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본다. 협의 프로세스의 유지



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 힘쓰겠다. 관계국과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 그는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았다는 북한의 발표와 함께 관계국의 반응에도 유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조 쌍방의 공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북한과 관계 각국 간의 연락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또한 올해가 북한과의 국교 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임을 상기시키면서 “양국 간에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호 왕래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임.

● **中, 北에 백두산 호랑이 3마리 수출(4/16, 중국신문)**

-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북한에 백두산 호랑이 3마리를 포함, 모두 5마리의 호랑이를 수출, 랴오닝성출입국검사검역국은 다롄(大連)삼림동물원의 호랑이 3마리에 대한 검역을 마친 뒤 4월 9일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에 보냈으며 이는 랴오닝성 백두산 호랑이 수출의 첫 사례로 ‘중조(中朝)우호의 해’를 맞아 ‘우호사자(友好使者)’가 될 것이라고 중국의 반관영 중국신문이 16일 보도
- 랴오닝성출입국검사검역국은 수출에 앞서 북한의 요구에 맞춰 엄격한 검역을 실시했으며 사육사를 동행시켜 이들 호랑이의 소독과 운송, 건강 등을 챙기도록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소개, 같은 날 쓰촨(사천)성의 벵갈 호랑이 2마리도 단둥을 통해 조선에 반입

● **中, 안보리 제재에 반대했다고 강조(4/14,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국제사회의 무기 비확산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면서 “이같은 정신에 입각해 중국은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했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러 대통령, 김정일에 친선 축전(4/17, 조선중앙방송)**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뒤늦게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는 러·조(북) 사이의 다방면적이고 효과적인 호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특출한 역할을 높이 평



가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그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공고한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고 소개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내주 방북(4/17,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24일께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17일 북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보도
-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라브로프 장관이 24일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로이터도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소식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0월 박의춘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북한 로켓 발사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임.

● **러, 北 IAEA 검증팀 추방에 실망(4/16,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16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이 이미 추방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실망스런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전날 “모든 이해 당사국과 관련 기구 특히 IAEA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러, 6자회담 거부 불구 北 제재 원치 않아(4/15,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5일 보도,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
-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핵 군축 회담 지속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고 주장

마. 북·일 관계

● **日각의, 대북 엔화반입 신고강화안 의결(4/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



금 지참액을 100만엔 초과에서 30만 엔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외국환령) 개정안을 의결, 이번 개정 정부령은 내달 12일부터 적용됨.

- 일본 정부는 또 현금 신고액 하향 조정과 함께 마련한 대북 송금 신고액 확대 방안은 오는 22일 재무성령으로 확정할 방침임. 대북 송금 신고액은 3천만 엔 초과에서 1천만 엔 초과로 확대된다. 모두 5월 12일부터 적용

● **김정일, 조총련에 장학금 송금(4/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을 맞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장학금 1억9천900만 엔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총련에 보낸 장학금은 총 155차례에 걸쳐 464억1천22만3천 엔에 달한다고 소개

● **日, 유엔 제재위에 北 14개 단체 제재요청(4/16,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작성하는 자산동결 대상 리스트에 북한 관계 14개 기업·단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
-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제출기로 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11개사에 일본 독자 정보를 통해 대량파괴무기 개발 및 수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3개 단체를 추가한 것임. 일본 정부가 리스트에 추가하는 곳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과학센터, 봉화병원 등임.
- 일본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결정하는 24일까지 추가할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지 정밀히 조사할 방침임.

바. 기타외교 관계

● **이란대사관 연회 개최(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이란대사관 무관이 이란 군대절을 맞아 17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연회에는 북한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EU, 北 최근 동향에 심각한 우려(4/18, 연합)**

- 유럽연합(EU)이 6자회담 거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등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EU 이사회 순변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는 17일 의장국 성명을 통해 “EU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며 핵 시설을 복구하기



- 로 한 북한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언급
- 의장국 성명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
 - 성명은 또 “북한 정부는 IAEA 검증팀을 추방한 결정, 핵 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을 재개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
- **北, 말레이시아와 유일하게 무비자 협정(4/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을 입국 사증(비자)없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집트 등 29개국이고, 북한이 비자면제를 해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방송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상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집계해 온 유럽의 법률회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주민이 입국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2008년까지 29개로, 이집트, 도미니카, 아이티, 요르단, 캄보디아, 몽골,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힘.
 - 북한이 유일하게 외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0년 4월 체결한 협정을 통해 한달 이하의 단기 방문에 대해 입국 사증을 일부 면제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설명
 - **EU, 美-北 직접대화 지지(4/17, 연합)**
 - 유럽연합(EU)의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교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긍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 그러나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6자 회담을 매개로 한 다자협의 틀 지지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고 설명
 - **EU, 北, 6자회담 틀 속 대화 계속 촉구(4/15, 연합)**
 -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이에 앞서 크리스티안 호먼 집행위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의장성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3. 대남정세

● 정부, 北 개성접촉 제의 수용(4/19,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측 (접촉) 제의를 수용,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실무인력 등 10명 내외의 관계자가 21일 중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은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 주요한 관심사항이며, 이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남북접촉이 국민의 신변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北, 개성공단 관련 남북접촉 제의(4/18, 연합)

- 북한 당국이 4월 16일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오는 21일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측이 지난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중대 사안을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으로 오라’고 통보해왔다”고 설명, 이 소식통은 “북측은 통보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측이 통보할 내용이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의 처분 문제에 대한 것인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부연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아소, 오바마에 ‘핵폐기 협력’ 친서(4/17)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한국시간 16일)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핵무기 폐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전했다. 친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麻生太郎) 전 총리가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달했음.
- 친서는 핵무기 완전 폐지를 위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은 전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로서 그 구상에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전 총리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가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그런 점들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방문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음.

● 美,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달말 북한문제 협의(4/17)

-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이달 말 회동을 갖고 북한 로켓 발사로 촉발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함.
- 마에하라 부대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면담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 의향을 밝힌 것과 대조됨.
- 마에하라 부대표는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힘.

● 美 “北 추방명령 대가 치를 것”(4/17)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거부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등에 대한 추방 명령과 관련, 대가를 반드시 치르



게 될 것이라고 16일 경고함. 국무부는 또 최근 북한과 대화를 갖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해 온 미 검증요원 4명은 수일내에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말함.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추방 결정에 대해 북측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들(북한)은 이들 요원을 쫓아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우리는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 지켜봐야만 하겠지만 그들은 국제사회의 뜻을 거부한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만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북한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안보리 참가국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무부 “北과 대화 갖고 입장전달”(4/17)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거부 선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등에 대한 철수 명령과 관련, 최근 직접 대화를 갖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남. 국무부는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해 온 미 검증요원 4명이 수일내에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접촉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conversations)를 가졌으며, 우리의 입장(views)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힘.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북·미간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양측 사이에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냉각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지게 될지 주목됨.
-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북·미간 접촉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는지,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우드 부대변인은 또 미국 검증요원들의 영변 핵시설 철수문제와 관련, “4명이 현재 영변에 머물고 있으며, 수일내 그곳을 떠나게 될 것”고 말함.
-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유엔 제재위원회가 몇차례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대상 기관 및 물품 선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러시아 “북한과 경수로 협상 안해”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 채택에 반발해 ‘경수로 자체 건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15일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함. 국영 원자력회사인 ‘로스아톰’의 세르게이 키리엔코 사장은 이날 열린 원자력 발전회의에서 “우리는 경수로를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북한과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그는 특히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맺지 않은 나라들과는 그 어떤 회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현재 가동이 중단된 북한 영변 원자로를 우라늄-235(U-235)가 0.7% 정도 들어 있는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임. 경수로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흑연감속로보다 어렵지만, 연료로 우라늄-235가 2~3% 들어 있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생산을 이유로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에 나설 수 있음.
- 천연우라늄이나 농도 2~3%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없지만, 우라늄 농도를 2~3%로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면 우라늄 농도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우라늄 농축 기술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온 이란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도 바로 우라늄 농축 기술 때문임.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 저농축 우라늄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도 전체 저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음.
- 러시아는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 회원국으로 주요 국가에 우라늄 원료를 주고 싶어도 상대국이 IAEA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우라늄을 제공할 수 없음.
-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수로 자체 건설’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전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거나 이를 대외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한편,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재가동 선언과 관련해 IAEA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외무부 소식통은 이날 이타르 타스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모든 이해 당사국과 관련 기구 특히 IAEA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러 “北 IAEA 검증팀 추방에 실망”(4/16)

-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16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이 이미 추방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실망스런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美, 北과 직접대화 불가피”<타임>(4/16)

-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직접 대화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시사 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15일



전망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상태임.

- 안보리는 제재 수준을 놓고 각국 간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 애초 제재결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그침.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라는 사실은 미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돼온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타임은 지적함.
-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안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음.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6자회담을 거부한 상황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절한 타이밍 조절과 북한에 제공할 당근책 제시임.
- 타임은 양자간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포기를 대가로 경제원조와 안보보장,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양보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미 국무부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입장은 이 같은 양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하리란 것임.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 북한의 기만책에 속아 선 안된다며 거부할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국무부 관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타임은 덧붙였음.

● “美정부, 북핵예산 1억4천여만弗 추가요청”(4/16)

-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추가 예산으로 1억4천2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2009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1억4천2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그는 “이 예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는 전비추가경정예산의 일환으로 요청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 2단계나 3단계에 대비해 책정하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음.
-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요청한 금액 중 의회에서 승인하는 액수만큼 군축비확산기금이나 경제지원기금 등의 항목으로 북한 핵폐기 시설 지원 등에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예산은 (비핵화가) 3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이라고 말함.
-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



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 관련 추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좀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었음.

- 그러나 북한이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과 핵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감시관들을 추방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됨.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활절 휴가로 휴회 중이기 때문에 오는 20일 개회하고 나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함.

● “日, 유엔 제재위에 北 14개단체 제재요청”(4/16)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작성하는 자산동결 대상 리스트에 북한 관계 14개 기업·단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 16일 전함.
-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제출기로 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11개사에 일본 독자 정보를 통해 대량과괴무기 개발 및 수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3개 단체를 추가한 것임. 일본 정부가 리스트에 추가하는 곳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과학센터, 봉화병원 등임.
- 일본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이들 3개 기업·단체를 포함해 총 15개 단체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미국 정부가 제출기로 한 11개 기업도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음. 일본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결정하는 24일 까지 추가할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지 정밀히 조사할 방침임.

● 전문가들 “中의 對北 영향력 한계..美가 나서야”(4/15)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고 미국이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국과 중국의 북한전문가들이 지적함.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전통적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나오자 딜레마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만을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반대하며 북한 편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음.
- 상하이 푸단대의 북한 전문가인 차이지안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곤경을 겪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의도외는 달리 분쟁과 혼란



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지원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이 처한 이런 딜레마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S)의 존 페퍼 연구원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조용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중국을 지적함. 페퍼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행사할 만한 영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중국이 차를 사서 연료까지 넣어줬지만 북한은 뒷좌석에 중국을 태운 채 벼랑 끝으로 차를 몰고 있다”고 비유했음. 그러면서 “뒷좌석에 앉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정치적 우방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 김정일 체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려왔음.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않으며 이를 잘 아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미국의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국장은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먼저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세계 최강국인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인정한다면 북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정상화가 대안이라고 말함.
- 대신,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 재개에 희망을 거는 모습임.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지아 칭귀 교수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 테이블이 없다면 북한 핵 문제는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북-중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지아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중 관계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음.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했지만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음. 상하이 푸단대의 추이즈잉 교수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말함.

● EU “北, 6자회담 틀 속 대화 계속해야”(4/15)

-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 재개를 위협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함.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함.
-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주는 메시



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라며 “EU 집행위는 북한이 6자회담 틀 속에서 대화에 기초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집행위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음.

- 이에 앞서 크리스티안 호먼 집행위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의장성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러 “6자회담 거부 불구 北 제재 원치 않아”(4/15)

-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5일 보도함.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함.
-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핵 군축 회담 지속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고 주장함. 보로다브킨 차관은 “러시아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준비할 때 6자회담 재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함.

● 헤커 “北 몇주내 플루토늄재처리 시작 가능”(4/15)

- 미국의 핵군축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비밀 시설에서 몇 주 내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함.
- 핵군축 전문가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는 헤커 교수는 NY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다시 짓는 데 6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그는 플루토늄 재처리가 시작되면 북한은 1년에 1개의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폭탄 제조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지난 2008년 6월 폭파했었음. 헤커 교수는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이 핵연료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함.

● “美, 北과 직접 협상 가능성 시사”<日언론>(4/15)

-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6자회담 이탈 선언에 대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미·북간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양자 협의를 겁



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함. 보즈워스 대표는 전날 방미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부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자협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마에하라 부대표가 전함.

- 마에하라 부대표에 따르면 보즈워스 대표는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을 향한 최선의 방책은 6자회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한국과의 연대는 물론 특히 의장국인 중국이 한층 더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함.

● 美 북한전문가들 ‘북·미 협상’ 강조(4/15)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14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핵프로그램 재가동 선언에 대해 북·미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침착한 대응을 주문함.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북한의 강경 발표를 “협상 전략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국민 반응하지 말자. 북한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고 말함.
- 셔크 교수는 거듭 “이것이 대화와 협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희망이 없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였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6자회담이 “수개월이나 일 년까지 중단될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이 파탄 났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지적함.
- 프리처드 소장은 이어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양자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 위기감시기구 서울사무소장을 지낸 피터 백 아메리칸대 초빙교수는 억류된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양측이 군축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은 기존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북한은 (예전) 미사일 발사로 잃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양보와 함께 상당 부분 원하는 것을 얻었다”며 “북한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와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음.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란도 마찬가지”라면서 “무기를 놓고 이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함. 볼턴 전 대사는 “(북한과) 협상할수록 그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선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고도 함.
-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레토릭(수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레토릭이 결코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함.

● “北, 수개월내 로켓 성공적 발사 가능” <美전문가>(4/15)

- 북한이 “몇개월 안에 다시 로켓 발사를 시도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민간 군사전문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박사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빅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3단계 추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정상 우주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는 “작은 실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 목격됐던 제어장치나 추진력의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평가함.
-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단계적 연료조절관과 자세 제어장치를 갖췄으며 폐회로 추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을 장착할 수 있는 고도의 발사용 로켓”이라고 그는 분석함. 그는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와 미군 장성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로켓은 발사 1, 2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특히 2단계 추진체는 북한이 의도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졌지만, 2단계 추진체가 완전연소된 후 상방향 우주로 날아가는 와중에 분리·점화돼야 하는 3단계 추진체가 이보다 훨씬 늦은 시점인 대기권 재진입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분리되는 바람에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설명함.
- 그는 “로켓 1, 2단계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거리도 기존보다 2배로 늘어 국제시장에서 북한 로켓의 판매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이란이 올해 북한 로켓을 구입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개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 <美전문가 “6자회담 조속재개 회의적”>(4/15)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또 북한의 유엔결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6자회담보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더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아울러 제기됨.
-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4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F통신이 전함. 그는 북한의 이번 6자회담 거부 발표에 대해 “이것은 6자회담의 끝이 아니다”며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문제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며 (6자회담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1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프리처드 소장은 또 북한은 그들이 원한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 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그는 “지금 문제는 너무 빨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언제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양자회담을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어떻게든 회담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데니 로이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안보리 성명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드러낸 6자회담 대신 미국과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결정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함. 그러나 로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유엔의 조치가 매우 절제된데다 미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을 무마할 필요에 의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고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함.
- 또 에번스 리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매우 불행한 일이며 실제로 추진된다면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위협을 재고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리버어 회장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은 열어 두되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와 추가 핵실험 등 위협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공조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반드시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검증된 전략을 따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제거되기 전에는 진정한 해답은 없다고 본다고 말함. 그러나 볼턴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미 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가능성을 점침.
- 그는 “6자회담은 처음부터 쓸데없는 것이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으며 앞으로도 무익하다”라면서 북한의 핵을 회담을 통해 없앨 수 없다는 게 자신의 오랜 견해였다고 주장함. 이어 볼턴 전 대사는 “김정일과 그의 정권이 없어지기 전에 어떤 진정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英, 北 핵프로그램 재가동 비난

- 영국 정부는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함. 영국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은 확고하고 균형있는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힘.
-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려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고 특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IAEA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클린턴 “北 추방령 무익한 대응”(4/1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성명 채택에 맞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및 불능화 검증 요원 추방령을 내린 것은 무익한 대응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북한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를 유엔 안보리의 우려가 담긴 적법한 성명에 대해 행한 무익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과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북한과도 대화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이 북·미 양자 또는 6자회담의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행동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한 백악관 입장과 비교할 때 절제된 것이라고 해석함.

● 美 “北 도발적 위협 중단해야”(4/15)

- 미국 행정부는 1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핵 프로그램 재가동을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함. 또 미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선언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심각한 행보”라고 지적하고 “핵무기 추구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북한에 대해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기브스 대변인은 “6자회담은 북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제시해 왔다”면서 “미국은 북한 및 주변국들과 6자회담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국무부도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6자회담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틀로 보고 있다고 말함.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안보리 의장 성명도 6자회담 조기 재개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2005년 공동성명에 대한 완전



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함. 그러나 그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서 “북한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수용하길 원하느냐 않느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문제”라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의사가 없음을 시사함. 우드 부대변인은 안보리 의장 성명외에 또 다른 국제사회의 대응이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개별 정부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한다”고만 말함.

● IAEA “北, 검증요원 추방령 통보”(4/15)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북한이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핵불능화 검증요원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고,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발표함. IAE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참여중인 사찰요원들에게 봉인과 카메라의 제거방침을 알리는 등 핵사찰에 관한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사찰요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북한을 떠나도록 통보했다고 밝힘.
- IAEA의 이 같은 성명 발표는 북한이 이날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IAEA 모니터 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공식 확인한 것임.

● “잃을 게 없는 미국 먼저 나서야” <中전문가>(4/15)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중국 학자가 주장함. 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벨퍼센터의 장후이 연구원은 14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힘.
- 그는 미국이 한반도의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 행사할 것을 중국에 촉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중국 당국은 북한이 그런 압력에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나아가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북 지렛대마저 잃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임.
- 장 연구원은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절박한 체제 생존과 경제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함. 그는 중국 처지에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측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핵심요소로 생각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힘.

- 장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더 많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이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중국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日총리 “北, 적절히 행동해야”(4/15)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북한의 북핵 6자회담 거부 선언에 대해 북한은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며 6자회담에도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함. 아소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요구도 포함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성심껏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함.
- 일본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소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 한편 북한의 6자회담 거부 선언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과 비핵화에 참여하도록 계속 촉구해 왔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 참여와 비핵화 절차를 재개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국 외무부는 “6자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전에 일시적인 후퇴가 있었다”고 답함.

● <러, 北 6자회담 거부로 지렛대 상실 걱정>(4/14)

-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채택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는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거부 및 핵 프로그램 재개 발표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명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함.
-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이룩한 성과를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나오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간곡히 요청함.
-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 제재만큼은 절대 안 되며 무조건 6자회담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대북 제재는 6자회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의장 성명 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이를 관철시켰음.



-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의장 성명에 대해 예상 밖으로 강경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적지 않게 놀라는 분위기임. 러시아는 이번 일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을 견제할 지렛대를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 6자회담은 러시아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임. 특히 러시아는 6자회담을 대신할 새로운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음. 새 채널에서 러시아가 배제되고 그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임. 이미 한반도 주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중국, 미국과 중국 등 3가지 형태의 양자 대화 그리고 한·미·일 3자 간 정책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6자 회담 존속’을 강력히 희망함.
- 콘스탄틴 코사체프 연방의회(상원) 외교관계 위원장은 북한의 6자 회담 거부는 북한도 바라는 바가 아닌 우발적인 선언이며 주변국들의 결속을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면서 “6자회담 거부는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북한과의 경제 협력 중단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선언을 현실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런가 하면 바실리 리하체프 상원 외교관계 부위원장은 “6자회담 거부는 매우 불안하고 극도의 우려를 낳는 일로 유엔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 그는 “6자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매우 중요한 협상 틀이 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처럼 북한 핵 문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회의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극도의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분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함.
-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따라서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대응으로 조성된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방안을 찾는 데도 고심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 내용이 예상보다 강했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 또한 생각보다 강경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면 할수록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교훈에 또다시 직면해 있다”고 말함. 그는 “곧바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中 “6자회담 지속적 추진 희망”(4/14)

-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의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중국은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혀짐.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핵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외무성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이는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과 유감 표명은 아니지만 북한이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6자회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장 대변인은 “6자회담은 수년간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관련 국가간의 교류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의장성명에도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함. 그는 유엔이 발표한 의장성명과 관련, “이는 각국과 장시간의 협상을 통한 결과물로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는 유엔 결의안의 채택과 새로운 제재조치에 반대했다”고 말함.
- 그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위원회가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장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직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중국은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함.
- 그는 성명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국제사회의 무기 비확산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 왔다”면서 “이 같은 정신에 따라 중국은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했다”고 말함.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내용상으로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됐지만 제재결의안 통과를 중국의 노력으로 막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됨.
- 그는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와 각국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함. 장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강조함.



● <北 ‘자체 경수로’ 카드로 ‘HEU개발’ 위협>(4/14)

- 북한이 14일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응해 내놓은 외무성 성명에서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언급한 것은 곧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풀이임. 이는 성명에 포함된 어떤 강수보다 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사안인 동시에 앞으로 북한이 핵협상에 다시 나설 때 ‘판돈’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포석이기도 함.
- 미국의 민주당은 야당시절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고를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으나, 사태 발전에 따라선 오바마 행정부가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 북한의 핵능력을 키우는 결과만 빚었다는 비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북한의 HEU프로그램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의 실책중 하나로 주장해온 것임. 북한 외무성 성명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경수로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주기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함.
- 이에 대해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언급은 우라늄 농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경수로 가동에는 연료봉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기술이 갖춰져야만 하므로 북한이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농축기술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수로 원자로에는 저농축우라늄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핵동력 공업구조의 완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우라늄 농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결국 이란식으로 갈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라고 설명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를 통해 1천10kg의 저농축우라늄(LEU)을 확보함. 이란은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서방측은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가진 이란이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원자력발전소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음. 저농축우라늄 1천10kg은 HEU 전환을 통해 원자폭탄 1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이라는 것.

● <대북조치 주무대로 부상한 ‘제재위원회’>(4/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조치의 주무대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원회)’로 옮겨짐. 안보리가 한국시각으로 14일 새벽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관련된 조정 내용을 보



- 고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은 개별 유엔 회원국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만,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과 제재조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리 부속기관인 제재위원회에 구체적인 조치를 명하면서 이미 결의된 1718호를 재확인하고 있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임.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12항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터키가 의장국을 맡고 있음.
 - 제재위원회는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결의 1718호의 제재 이행상황을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지만 자산동결을 비롯한 금융제재나 여행제한을 할 개인이나 단체 등의 목록은 선정하지 않아 금수조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임. 그러나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곧 제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재대상 기관과 물품 선정 작업이 이뤄져 실질적인 제재에 이뤄질 전망이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터키가 위원회를 2~3일 내에 소집할 것으로 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와 일본 등 핵심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재대상기관과 물품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의장성명에서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물품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자산동결과 같은 경제적 제재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대상 목록에 선정된 북한 기업이나 물품은 유엔 회원국들과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고 설명함.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제재위원회가 결의 1718호 8항의 제재내용을 ‘조정(adjust)’하게 된다”며 “이는 제재대상 기관과 물품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
 - 그는 “무기와 관련된 기관과 물품이 제재 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것”이라며 “사치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과 협의를 거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10여 개 기업 목록을 이미 선정, 조만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유엔본부의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도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 리스트를 분류해 놓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대사도 신속하게 제재 대상 주체와 물품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경한 의장성명에 합의하는 대신 제재 대상 선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주유엔 대사도 제재 실천보다는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조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음.
 - 외교 소식통은 “유엔에서 안보리의 결정과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의장성명도 제재위원회의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방식과 안보리에서 P-5의 거부권 등으로 실제 이



행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함.

● 리’ “북한 6자회담 거부 유감”(4/14)

- 러시아 정부는 14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채택에 반발해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함.
- 성명은 이어 “북한의 조치는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이룩한 성과를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러시아 당국은 또 “아직 북한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나오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 그런가 하면 러시아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성명 채택 직후 “러시아는 처음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라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뜻으로 대응한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시설의 원상복구와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비롯한 핵개발 노력의 재개·강화 방침을 밝힘.

● <北유엔대표부 비장한 분위기속 ‘침묵’>(4/14)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13일(현지 시간)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신선호 대사와 박덕훈 차석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기자들에게 일절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외부 인사 등을 초청해 모종의 자체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북한 대표부가 김 주석을 기리며 최대 명절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과 같은 날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임.
- 한편,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함. 성명은 특히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걸고 드는 적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상정·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함.

● 北 “6자회담 절대 불참..기존합의 파기”(4/14)

-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의 시험 발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 북한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했다”고 덧붙였음.
- 이어 성명은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시설의 원상복구와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비롯한 핵개발 노력의 재개·강화 방침을 밝힘. 성명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걸고드는 적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상정·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함.
- 성명은 북한의 위성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지적해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위성 발사이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반박함.

- 성명은 “일본은 저(자신)들의 주구이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해도 일 없고(괜찮고) 우리는 저들과 제도를 달리 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싸잡아 비난함. 성명은 이번 일은 유엔헌장상 주권평등 원칙과 공정성이라는 “허울 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4/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함.
- 이번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함. 이날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채택됨.
-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기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돼 10분만에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종료됨.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온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회의는 성명 낭독전 어떤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끝남.
-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기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상 기업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



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재 대상 명단의 선정은 제재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함.

- 의장성명은 이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유엔 일각에서는 의장성명의 구속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특히 이번 의장 성명의 경우 ‘결정’과 ‘요구’가 담겨져 있어 사실상 결의안에 준하는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평가함. 또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번 성명은 강한 의장성명이다. 우리는 성명의 요소들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이 6자회담과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현안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美 3월 카터 방북 타진…北 거부”(4/19)

- 미국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달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했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비공식으로 타진 받은 북한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신문은 미국 및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 이번 제안은 미국이 북미 양자협약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미국의 양자협약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3월부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모색하는 등 북한에 여러 통로로 양자대화를 제의해 왔음.

● 평양체류 미국무부 직원도 北떠나(4/18)

- 북한 영변지역에서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감독해왔던 미국의 핵 전문가 4명에 이어 평양에 머물면서 북·미간 연락업무와 불능화팀 지원업무를 맡아왔던 미국 국무부 직원도 18일 북한을 떠났음. 이로써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운영돼온 미국 정부의 북



핵 관련 ‘연락사무소’도 폐쇄됐음.

- 정부 당국자는 “미국 에너지부 소속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감독해온 전문가 4명이 17일 북한을 떠난 데 이어 평양에 머물러왔던 미국 국무부 직원 1명도 18일 북한을 출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미국은 2007년 11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감독하기 위해 영변에 불능화팀을 파견하면서 국무부 직원 1명을 평양의 호텔에 장기 체류시키고 북·미간 연락업무 및 불능화팀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음. 하지만 1년 5개월여만에 이 직원이 북한을 떠남에 따라 북핵 관련 북·미간 현장 대화창구였던 ‘영변채널’도 끊기게 됐음.

● 美과학자들 “北요청으로 이르면 7월 방북” <RFA>(4/16)

- 북한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르면 7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 국무부는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시라큐스대의 스투어트 토슨 교수가 밝힘. 토슨 교수는 15일(워싱턴 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과 하는 과학교류’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이들 방북단은 197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볼티모어 박사를 단장으로 해 컴퓨터와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자 수명과 과학단체, 미국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방북단의 목적은 북한과 미국의 과학자간 신뢰관계를 정립하고 어느 분야의 과학 교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20명, 22명의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 김책공대를 방문한 이래 4년만에 미국의 중량급 과학자들이 방북하는 것이라고 RFA는 설명함.
- 북한은 2001~2005년 7차례 김책공대 연구진을 시라큐스대에 보내 공동연구토록 했으며, 김책공대의 컴퓨터공학자 6명이 2007년부터 3개월~1년 일정의 미국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북한 당국이 불허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한편 강연회에 참석한 캐서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과학자를 미국에 장기 연수시키는 것은 꺼리지만 독일에는 무리해서라도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건축학 전공 학생 10여명이 독일에서 최근 5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쳤고 이달부터 30여명의 학생이 컴퓨터를 포함한 석사과정을 시작했다고 전함.

다. 중·북 관계

● 北김영남, 방북 中정협 부주석 면담(4/17)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중인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면



답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은 후진타오 총서기와 김정일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음.
- 리 부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4일 방북했으며 북·중우의담에 현화하기도 했음.

● 신분증만 있으면 단둥서 북한관광 ‘OK’(4/14)

- “신분증만 있으면 단둥에서 북한관광 가능합니다.” 중국 단둥이 중국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중국인들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더라도 단둥을 통해 자유롭게 북한 변경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됨. 14일 동방조보(東方早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단둥과 러시아 접경지역인 헤이허(黑河) 등 5개 접경지역을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어느 곳에 거주하던 신분증만 있으면 이들 지역에서 하루만에 출국 수속을 밟아 북한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 접경국가의 변경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됨. 이번 조치로 단둥에서는 간단한 출국수속을 통해 인접지역인 신의주 등 중국과 인접한 북한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됨.

라. 일·북 관계

● “1999년 北 ‘미사일’ 화물선에 日 물자 있었다”(4/18)

- 1999년 인도 구자라트주 칸들라 항에서 미사일 제조설비 등을 싣고 있다가 적발된 북한 화물선 ‘구월산’호에 일본산 장비와 재료 등이 실려 있었다고 인도의 한 전직 고위 관리가 18일 밝혔음. 인도 국방 개발연구기구(DRDO)에서 근무하며 당시 구월산호에 대한 수색을 지휘했던 K. 산타남 씨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일본 회사가 만든 3차원 측정장비와 수치제어 공작기계, 그리고 마레이징 특수강 등이 북한 화물선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음. 마레이징 특수강은 미사일의 뼈대를 만드는데 주로 쓰임.
- 그는 또 구월산호 선장이 조사 초기 수질 정화 설비를 싣고 리비아로 간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화물들을 파키스탄 카라치에 하역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구월산호에서는 미사일 관련 설비 뿐 아니라 미사일 설계도까지 발견됐고, 여러 언론 매체들은 구월산호에 대해 ‘은폐된 미사일 공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음. 문제의 장비와 재료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본 기업들은 모두 해당 제품을 북한에 수출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인도 당국자들은 북한이 해당 물자들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日각의, 대북 엔화반입 신고강화안 의결(4/17)

-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지참액을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외국환령)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개정 정부령은 내달 12일부터 적용됨.
- 정부는 또 현금 신고액 하향 조정과 함께 마련한 대북 송금 신고액 확대 방안은 오는 22일 재무성령으로 확정할 방침임. 대북 송금 신고액은 3천만엔 초과에서 1천만엔 초과로 확대됨. 모두 내달 12일부터 적용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 대상 단체 등에 대한 자금 흐름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함.

● 日, 안보리 의장성명 “외교성과” 평가(4/14)

- 일본 정부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일본 외교 노력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명백히하는 등 일본의 주장에 따른 이례적으로 강력한 내용”이라고 말함. 가와무라 장관은 구속력이 있는 결의 채택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형식은 의장성명이지만 새로운 결의와 동등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함.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성명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담화를 내고 북한에 1718호의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개최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열매를 거뭇다”고 평함.
- 이토 신타로(伊藤信太郎) 외무성 부대신은 공동보조를 취하던 미국이 막판에 결의안을 포기한 데 대해 “미국이 보조를 거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은 모든 국면에서 긴밀히 연대해왔다”고 말함.

마. 러·북 관계

● 러 대통령, 김정일에 ‘친선’ 축전(4/17)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뒤늦게 전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는 러.조(북) 사이의 다방면적이고 효과적인 호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특출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그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공고한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라브로프 러'외무, 내주 방북(4/17)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24일께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라브로프 장관이 24일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로이터도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소식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0월 박의춘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북한 로켓 발사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임.
- 이번 방문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 등 북측 인사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음.
-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과 핵시설 재가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바. 기타

● EU “北 최근 동향에 심각한 우려”(4/18)

- 유럽연합(EU)이 6자회담 거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등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는 17일 의장국 성명을 통해 “EU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며 핵 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북한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 의장국 성명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성명은 또 “북한 정부는 IAEA 검증팀을 추방한 결정, 핵 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을 재개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음.



- “北, 말레이시아와 유일하게 무비자 협정” <RFA>(4/18)
 - 북한 주민을 입국 사증(비자)없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집트 등 29개국이고, 북한이 비자면제를 해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이 방송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상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집계해 온 유럽의 법률회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주민이 입국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2008년까지 29개로, 이집트, 도미니카, 아이티, 요르단, 캄보디아, 몽골,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8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대국의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수에서 덴마크가 157개국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44개국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어 12위, 북한은 83위로 집계됐음. 북한이 유일하게 외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0년 4월 체결한 협정을 통해 한달 이하의 단기 방문에 대해 입국 사증을 일부 면제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EU “美-北 직접대화 지지”(4/17)
 - 유럽연합(EU)의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교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긍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그러나 6자 회담을 매개로 한 다자협의를 지지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영변 핵시설 가동재개 시사, 사찰단 추방 등 행동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취하면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음.

- “北로켓은 ‘도발 외교’” <브라질 언론>(4/17)
 - 브라질 최대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 외교’로 규정함. 이 신문은 사실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역 긴장을 재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냉각될 것을 우려함. 사실은 이어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외부세계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핵 및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말함. 또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선진국들로부터 석유와 식량 등을 획득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함.



- 사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막기 위한 압력을 주도해온 사실과 함께 북한이 1994년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을 수용했다가 이행하지 않았고, 2005년에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과정도 소개함. 이와 함께 국제전문가들이 북한의 2006년 핵실험과 최근 로켓 발사를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함.
- 사설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뒤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2007년 폐쇄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을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함. 사설은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포기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 외교가 앞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함.

● “北헌법개정안, 후계구도 내용인듯” <佛언론>(4/14)

-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장성택(63) 노동당 행정부장을 새 국방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북한 지도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2일 전함. 이 신문은 “권력자의 부재시 집단 지도체제가 대신해 과도기를 이끌 것”이라면서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진단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최고인민회의의 북한 헌법개정안 의결과 관련, 신문은 “1992년 헌법개정에 따라 김일성 전 주석의 권력이 아들에게 이양되는 것을 승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계구도 형성 과정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신문은 노동당 최고지위에 있으면서 안보와 사법부를 관장하고 있는 장성택의 국정 관리에 대한 영향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커졌다면서 “현재 고려되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의 3남 중 한 명이 부상하고 동시에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이 로켓발사 후 김일성 광장에서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 신문은 “이번 로켓 발사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목적 외에 북한 내의 정치적 과제였음을 가늠케 한다”고 전함. 이어 신문은 로켓발사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면서 눈부신 활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한편 그의 건강악화설을 일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美기지 이전시기 최종 조율(4/17)

- 한국과 미국은 오는 23일 고위급협상을 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7일 밝힘. 이번 협상에는 한측에서 장수만 국방차관이, 미측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참가함.
-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 이전시기와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전시기와 비용 분담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우리측은 2015년 이전에 완료하자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2016년 이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지이전 비용은 한국이 5조원 가량을, 미측은 6조8천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이전시기와 비용이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홀브루크 “한국 아프간 기여에 감사”(4/16)

- 리처드 홀브루크 미국 국무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담당 특사는 16일 “한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힘. 홀브루크 특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16~17일 도쿄에서 열리는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중국을 거쳐 방한한 홀브루크 특사는 이날 유 장관과 면담에서 아프간 및 파키스탄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원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민간재건팀(PRT)의 규모 확대와 일본과 협력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고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 홀브루크 특사는 유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며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PSI전면참여> PSI는 무엇?(4/14)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



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임. 2003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14일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PSI의 목표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음. 이를 위해 PSI는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 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참여국들은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혐의 선박의 승선·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승선·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이같은 PSI 참여국들의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례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사건으로,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 강제 검색 없이 차단에 성공,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5월 PSI 5주년 회의에서 2007년 6월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 차단과 같은 해 2월 시리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시험 장비 부품 수출 차단 등 5건의 성공 사례를 추가로 발표함. 일각에서는 아무리 참여국의 재량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PSI에 따른 각국의 차단 조치가 국제법상 모든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누리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82)이 무해통항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한 12개의 항목에 WMD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임. 또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이외에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PSI 차단 조치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PSI 주도국인 미국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범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2004년 4월 비정부 조직·단체의 WMD 획득을 금지한 안보결의 제1540호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해양법이 제한 대상을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무해통항권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면서 “PSI 참여국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함.

● <PSI전면참여> 무엇이 달라지나(4/14)

- 정부가 14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도 역내·외 차단훈련에 참여하고 WMD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PSI전면참여를 계기로 비확산에 대한 국제공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적으로만 PSI에 참여해 옴.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면서 총회와 ‘운용전문가회의’(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등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됨. 이 회의에서는 WMD와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조율이 이뤄짐.
- 외교부 당국자는 “PSI전면참여의 핵심은 정보 공유”라며 “PSI에 따른 활동은 기존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 엄밀하게 말하면 종전과 달라지는게 없지만 어떤 정보를 갖고 움직이느냐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함. 1년에 2~3차례 열리는 WMD 차단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6번에 걸쳐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했지만 정식 참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단을 파견하지는 못함. 차단훈련 참가는 의무는 아니어서 총 94개국의 가입국중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는 20~30개국 정도며 이 중 선박 등 물자까지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7개국임. 올해 훈련은 10월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첫해인만큼 일단 물적지원은 없이 인력 중심으로 참가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북한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임. 외교부 당국자는 “PSI는 새로운 법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함. 이 당국자는 “만약 WMD를 실은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PSI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함.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상선에 대한 정선, 검색,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해경에 의해 취해질 수 있음.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상선의 남북한간 항행이나 북한 동-서해간 항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WMD는 물론 일반 무기나 부품의 수송도 금지돼 있음. 하지만 만약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PSI차단훈련이 벌어진다면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



적도 있음. 정부 당국자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차단훈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PSI전면참여> 美 “한국 계획 환영”(4/15)

- 미국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 분위기가 역력함.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힘. 다만 PSI 전면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때문인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 반응을 일단 유보함. 그동안 미 정부는 PSI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한국 정부에 상세한 것은 물어보라”는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PSI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PSI 체제의 중요한 진전임.

나. 한·중 관계

● 中 “영향력 확대, 韓에 위협 아니다”(4/14)

-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발전은 다른 국가에 위협도, 도전도 아닐뿐 아니라 이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장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이며 양국의 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초로 한국과 각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세계금융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국과 손을 잡고 도전을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응해 한·중 양국 간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기획재정부는 전날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경제, 정치, 외교 분야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다. 한·일 관계

● 韓日외무, 대북·6자회담 협력 합의(4/16)

-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장관은 16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회담을 열어 대북 문제 및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음. 이날 회담에서 한일 외무장관은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어느 정도 냉각 기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모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배석했던 조태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전함.
- 특히 유 장관은 “이달 말 예정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의 방중 기회에 중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함. 또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나카소네 외상은 “한·미·일 간 긴밀한 협의, 협조가 있어서 전혀 없이 강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안보리 결의는 아니지만 강한 의장성명이 나와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유 장관도 동감을 표명함. 이어 양 장관은 “북한이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차분히 대응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이날 나카소네 외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으며 이에 유 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보면서 검토해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이 밖에도 유 장관은 문부과학성의 자유사(自由社)판 왜곡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관련, “일본측이 좀 더 신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주일대사관측이 전해짐.

라. 미·일 관계

● 아소, 오바마에 ‘핵폐기 협력’ 친서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한국시간 16일)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핵무기 폐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전함. 친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麻生太郎) 전 총리가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달함.
- 친서는 핵무기 완전 폐지를 위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은 전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로서 그 구상에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짐. 아베 전 총리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가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그런 점들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방문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마. 미·러 관계

● 미·러, 오는 24일 START 첫 협상(4/16)

-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4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한다고 16일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첫 공식 회담이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며 현재 양국이 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오는 12월 시효 만료되는 START-1 후속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오는 7월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까지 1차 초안을 만들기로 함.
- 양국은 감축 대상 무기와 그 숫자, 이후 검증과 사찰 방법 등을 두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양국 모두 시효 만료 전 성과물을 낸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이견이 클 경우 예상보다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임. 일각에서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MD) 계획과 이란 핵 프로그램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날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에 참석, “START 후속 협상이 완전히 이뤄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함. 추르킨 대사는 양국은 2002년 ‘전략공격 무기감축협정(SORT)’에 명시된 것보다 무기 수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일 것이라면서 새 협정에는 핵탄두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이동 수단도 제한해야 하고 영토 밖 전략무기 배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함.

바. 중·러 관계

● 러시아, 시베리아-中 송유관 건설 승인

- 러시아 원유가 앞으로 2년 후인 2011년부터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공급됨. 러시아 정부는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영 송유관 운영회사인 트랜스네프트가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이르쿠츠크에서 시베리아를 통해 헤이룽장 모허(漠河)를 잇는 송유관 건설이 완공되면 연간 1천500만t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에 공급됨. 러시아는 이를 위해 조만간 1단계로 이르쿠츠크주 타이셰트에서 아무르주 스코보로디노간 송유관 건설에 착수함. 중국은 안정된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고 러시아는 안정되고 믿을만한 판매 시장을 개척한 셈임.
-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월 ESPO 중 중국지선 건설 및 러시아 원유 공급 합의서에 서명함. 러시아는 지난 2005년 타이셰트와 나훗카를 잇는 총연장 4천700km의 ESPO 송유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음.



사. 기타

● **청해부대, 소말리아서 첫 임무 수행(4/16)**

-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임무를 띠고 지난달 13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항한 청해부대가 16일 오전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돌입함. 이형국 합참 해외파병과장(대령)은 이날 “청해부대가 한국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 동진상운 소속 상선인 ‘파인갤럭시’ 호송을 시작으로 임무에 들어갔다”며 “해당 상선을 아덴만 입구에서 지부터 해역까지 호송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함.
- ‘파인갤럭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벨기에로 향하는 1만2천t급 선박으로, 화학물질을 선적하고 있다고 이 과장은 전함. ‘파인갤럭시’는 선적이 중남미 바하마이고 선주가 일본인이지만, 11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어 우리 해군의 보호대상에 해당됨.
- 청해부대의 첫 번째 임무함정인 문무대왕함은 호송임무 지역인 아덴만 입구에서 파인갤럭시를 접선해 국제권고통항로(IRTC) 서향항로를 통해 640마일(1천168km)을 항해해 지부터 해역까지 호송함. 이 과장은 “13노트의 속도로 항해해 5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18일 새벽에는 호송 종착지인 지부터 해역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말함. 청해부대는 파인갤럭시 호송 임무를 완수한 직후인 20일에는 또 다른 상선 3척을 지부터 해역에서 아덴만 입구까지 호위할 예정임.

● **柳외교, 파키스탄 지원회의차 16일 방일(4/1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파키스탄 우방 각료회의’ 및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18일 방일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
- 우방 각료회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키스탄의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지원국 회의는 단기적 경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의체임. 이번 파키스탄 지원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20여개국과 유엔, 세계은행 등 10여개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며 유 장관은 파키스탄 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유 장관은 일본 방문 기간인 16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현안 및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



[참고 1] <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 과정> (연합뉴스, 4/14)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앞서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음.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다음 날인 6일부터 주요국간 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논의에 착수했으나, 엿새만인 지난 11일에서야 애초 결의안 채택 논의보다 격화된 의장성명 수준의 입장 표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발표된 의장성명은 11일 초안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채택됐으며, 이날 안보리 회의는 토의 없이 10분 이내에 끝났음.

다음은 의장성명 공식 채택까지의 진행상황.

-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발표. 4월 4~8일 발사하겠다고 IMO에 로켓 궤도좌표와 함께 통보.
-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 ▲4.5 = 북한 한국시각 오전 11시30분 15초에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일본, 북한 로켓 발사 30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트 헬러 대사에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
- ▲4.6(뉴욕 4.5) = 안보리, 3시간가량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이어 주요 6개국 협의 개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의 이견으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논의 지속키로 합의.
- ▲4.7(뉴욕 4.6) = 안보리 주요 6개국 이틀째 협의.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차이 재차 확인.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회의를 마친 후 “현 시점에서 아무런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
- ▲4.8~4.9(뉴욕 4.7~8) = 당초 예정됐던 7일 회의 취소. 결의안 및 의장성명 놓고 주요 6개국 신경전 속에 협의 이틀간 공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7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고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필요하고 강력한 조



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

- ▲4.10(뉴욕 4.9) = 주요 6개국 이틀 만에 협의 재개.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 “논의가 생산적이었다” 설명. 미국이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쪽으로 기우는 등 안보리 대응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
- ▲4.12(뉴욕 4.11) = 안보리 주요 6개국 협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 비난하는 내용 담은 의장성명 채택키로 합의. 이어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 비공개회의 개최해 의장성명 채택에 기본적인 의견 일치.
- ▲4.14(뉴욕 4.13) =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에서 의장성명 공식 채택.

june@yna.co.kr

(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11000000AKR20090414046200009.HTML>



[참고 2] <유엔 안보리 주요 대북조치 일지> (연합뉴스, 4/14)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낮 12시 (한국시각 14일 오전 1시)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제재대상)기관과 물품을 지정함으로써 결의 1718호 8항에 명시된 조치들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1718호 제재 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안보리에 제재대상 명단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음.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및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와 경고·비난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원해왔음.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관련 주요조치 내용.

◇결의(총 10건)

-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에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 <이집트, 인도, 유고>).
-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 ▲결의 제1718호(2006.10.14)=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7건)

-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 ▲1994.3.31 = 북-IAEA(국제원자력기구)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협의 촉구.
-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 ▲2009.4.13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및 결의 1718호 제재 강화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의장 대언론브리핑(총2회)

- ▲2003.2.19, 2003.4.9 = 북한 NPT 탈퇴선언(2003.1.10) 관련, 북핵문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2회 설명.

hyunmin623@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11000000AKR20090414052400043.HTML>